

수석보좌관회의

북송금 사건과 150억원의 수수 의혹사건은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별개의 사건

오늘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특검 기간 연장문제에 관해 먼저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특검의 보고를 받고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대북송금 의혹사건에 관해서는 거의 수사가 완결상태에 있고, 150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사건이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대북송금 사건과 150억원의 수수 의혹사건은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별개의 사건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특검과 별도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150억원 수수의혹사건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것을 검찰에서 수사할 것인가, 새로운 특검에서 수사할 것인가하는 판단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특검으로 수사를 하는 문제는 국회의 결정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국회의 결정을 지켜본 뒤

에, 검찰의 수사여부를 검찰이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나라당에서는 '특검을 연장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국정처리를 협력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국회는 국민을 위한 기구이지, 정쟁의 도구이거나 범법혐의자의 도피소로 악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국회를 성실히 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검은 대북송금 의혹사건의 수사로 마무리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역시 법리입니다. 법적으로 별개의 사건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